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무산

인준 가능성 '0'…與, 자진사퇴 기대
인사청문특위, 李 후보자 고발 검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흡 현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회의가 결렬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활동 종료를 공식 선포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만나 청문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 결렬을 전하면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는 내려진 것 같다"면서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를 살리고 현법을 살리고 현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

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은 '인사안건을 직권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인데다 설령 표결을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결자해지 차



어디갔을까?

이동흡 현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24일 오전 텅 빈 국회 인사청문회장의 조명등이 이 후보자가 앉았던 빈자리를 비추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논란 증폭 '특경비' 실태 점검

50개 기관 올해도 6524억 편성…월 30만원 증빙서류 없이 용돈처럼 써

이동흡 현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특경업무경비(특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여러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경비는 공무원이 받는 경비 가운데 하나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월 30만원씩 쓸 수 있어 용돈 성격이 강하다.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드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다.

2011년부터 조사도 대상업무에 포함되면서 액수가 늘었다. 올해 예산

안을 보면 특경비는 50개 기관에 652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특경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집행부명성을 높이고자 특경비는 편성된 경비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특경 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경상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30만원까지 매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면 사용내역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로 현법재판소는 2010년에도 특경비를 신불 구입비로 집행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적자를 받았다. 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이 모임에 올랐다. 공정위는 세종시 이전으로 출장조사가 들어난다며 특경비를 전년보다 49.4% (3억4100만원) 늘린 10억3100만원 편성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DB) 업체인 '렉시스네트워크' 등 유료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특경비

36억원을 예산안에 배정했다. 경찰청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로 지급하는 월 17만원을 특경비로 처리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에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우선 예산집행당이 기획재정부에서 특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분보 1월 21 일자 4면 '국

회의원 3명 중 1명꼴 겸직' 기사와 관련, 민주통합당 입내현 의원은 24일 "4·11 총선 당선 직후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정책 포럼은 봉사단체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기간)

- 모집전공 :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원서 접수 기한 :
 - 특별전형(면접) :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아간강의)

3. 관리자과정

- 모집대상 :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아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 (062)530-5196, FAX :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대선전략 부재·지도부 공백 패인"

■ 민주 초·재선 의원들 '대선결과 분석·평가' 토론회

시도당 권한 강화·계파정치 척결 강조

민주통합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마

련한 '대선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평가와 전망'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김현미 의원은 밤제문을 통해 "이번 대선의 실패는 민주당의 실패"라며 역부족이었던 민주당의 선거운동과 전략을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캠프의 소통2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대선기획단의 뛰늦은 출범, 지도부 공백 사태 등으로 선거 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

며 "후보 단일화와 2030 투표율을 70% 대, PK(부산·경남) 득표 40%가 유일한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세대, 계층별 유권자 분석이 없으니 이에 따른 전략, 맞춤형 정책, 홍보, 유세일정을 만들어 낼 수 없음은 당연했다"고 자성했다.

또한, "위원장 10명으로 구성된 선대위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다"며 "동네 구의원 선거에도 있는 지도부가 없

이 대선을 치른 것"이라고 꾼집었다.

신경민 의원도 "민주당은 '단일화 필승', '민주 대 반민주 필승'이라는 몇 가지 신화에 빠져 있었다"며 "합리성, 치열성이 사라지고 승리의 환상에 자아드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후보의 매력을 과소평가한 점 ▲대선 TV토론회에서 통합 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 후보를 거칠 없이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유권자의 반발감을 사게 된 점 ▲종북 차단전략 부재 ▲불리한 미디어환경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당내 구조 등을 폐해요인으로 꼽았다.

김지연 미디어리서치 상무는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는 50대를 많이 주목하지만 민주당은 30대에서 생각보다 지지가 없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정당추진 청장년 네트워크'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호남에서 바라보는 대선 평가와 민주당 쇄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과 오승용 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진 변호사와 허석 전 순천 시민의 신문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지난 12·19 대선은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정책과 전략 부재, 후보자와 당의 문제, 이를테운 단일화 실패 등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면서 "당 쇄신이 실질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민주당은 정체성이 모호하고 무책임하며, 민주주의는 없고 계파만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다양한 계급·계층과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담아내는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중앙 당보다 시·도당의 권한(인사·재정)을 강화하고 계파정치를 해소함은 물론 공천심사위를 법률적·윤리적 부작자로 만드는 상생의 정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도 발제를 통해 "민주당의 현 모습을 보자면, 5년 전 대선 패배 이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며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쇄신한다고 해놓고 쇄신을 보여준 것은 당 정치인과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국한 된 쇄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종혁기자 golee@kwangju.co.kr

딴죽을 거는 야당성은 없어져야 한다"며 "어떻게든지 박근혜 점원이 성공하기 바란다. 우리도, 정부도, 여당도 거듭나는 상생의 정착을 시작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공약, 다소 이견이 있다더라도 결충·협의가 가능한 공약을 최대한 합의 해 빠른 시간 내에 적극 추진하겠다"며 "박 당선인 공약 중 수정하거나 폐기 요구할 공약들도 정치적으로 설득해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공통공약' 실행 착수

'대선공약실천위' 가동

민주통합당은 24일 박근혜 당선인과 공통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대선공약실천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역대 정책위의장단으로 구성된 대선공약실천위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 공약 실천 로드맵 수립 ▲박 당선인의 공약 점검 및 이행 촉구 ▲여야간 공동 공약 실천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상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대통령도,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박 당선인과 어젠다를 갖고 깊이 논의해 (공약 실천의) 추진력과 동력을 만드는데 협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집권 초기 100일은 집권 5년의 로드맵이 완성되는 시기로, 이렇게 중요한 때 종래 야당의 속성으로 트집이나 잡고

여기면 아무 소용 없는 일"이라고 꾼집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사전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으나 모바일 투표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비대위원장은 지도체와 관련, "단일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며 "위기시에는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라며 단일 지도체제 도입에 무게를 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바일 경선 참여 당내로 한정하자"

문화상 비대위원장 당 지도부 선출 관련 언급 논란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와 관련,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에서는 당원과 대의원 등 당내로 모바일 경선 참여 대상을 한정하면 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의 상장처럼 된 좋은 제도로, 모바일 투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세를 동원하면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선거인단이 100만명 넘

을 명철학

人間의 길 흥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에서도 죽한끼 제대로 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 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판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민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민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자리 철성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숙인, 역술인 활용)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